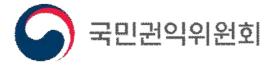
# 2022 ~ 2026 성과관리 전략계획



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 전략계획(2022~2026), 2022. 8.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(044-200-7119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506호

# 목 차

l.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······ 1
1. 그간의 정책성과1
2. 향후 정책 추진방향6
II.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······ 8
1.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8
2.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10
Ⅲ. 세부 추진계획12
전략목표 I 12
전략목표 II 26

### Ι

#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

### 1. 그간의 정책성과

### ① 지속적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

### 반부패·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

- 부패인식지수(CPI): ('17) 54점, 51위 → ('21) 62점, 32위 (역대 최고점)
- 공공청렴지수(IPI): ('17) 8.02점, 24위 → ('21) 8.09점, 18위 (아시아 1위)
- ■공공기관 청렴도 : ('17) 7.94점 → ('21) 8.27점
-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반부패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
  - (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) 대통령(의장), 권익위(간사) 등 15개 반부패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(대통령 주재)를 구축('17.9월) 하여 범정부 반부패 협력을 제도화
    - \*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, 전관특혜 근절, 부동산 부패 청산 등 논의(총 7회), 제5차 협의회부터 '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'로 변경·개최
  - (청렴사회민관협의회) 공공·경제·직능·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가 반부패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('18.3월)
    - \*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방안,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등 19건의 개선안 제안
  - (반부패종합계획)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로드맵(2018~2022)인 「5개년 반부패종합계획」마련('18.4월) 및 이행 관리
    - \* '채용비리 관리 강화', '갑질 근절' 등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, 과제 이행여부 반기별 점검
-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강화
  - (이해충돌방지법) 공직자의 사익추구 근절 기반 구축을 위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('21.5.18) 및 시행('22.5.19)
    - \*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,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등 신고· 제출 의무(5개), 가족채용 제한,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제한·금지 규정(5개)

- (공공재정환수법) 체계적 재정누수 대응을 위한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19.4.16) 및 시행(20.1.1)
  - \* 부정청구 금액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부과, 명단공표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
- (청탁금지법) 법 운영 성과분석 및 제도 보완 지속 추진
  - \* 가액범위 개정('18.1.17) : (경조사비) 10만원→5만원 (선물) 농축수산물과 그 가 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(명절 전후에는 20만원까지 인정, '22.1.5)
- (공무원 행동강령)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행위 기준을 강화하고, 갑질 근절을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('18.12.24)
  - \*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강화,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('18.4.17)
- (부패방지권익위법)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 개정('21.8.17)

### ②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

- 공직사회 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근절·해소
  - 해외출장 지원 전수점검('18.5.1~6.30)을 통한 종합대책\*을 수립('18.7.26) 및 각급기관의 후속조치 이행결과 발표('18.12.31)
    - \* 해외출장 부당지원 유발법령 정비,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 등
-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·대책 마련
  -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로 채용비위자 징계·처벌,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실시('17년~, 총 4회)
    - \* 채용비리 679건 적발, 피해자 3,515명 구제
- 국민의 삶을 바꾸는 '생활적폐 대책협의회' 출범('18.12.10)
  - 협의회\* 구성·운영을 통해 채용·학사비리, 탈세, 안전분야 부패 등 생애주기별 9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·관리
    - \* 교육부(유치원), 국토부(재건축), 복지부(사무장병원) 등 10개 기관 참여
-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
  - 여야 국회의원의 자발적 부동산 투기 조사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특별조사단(32명) 구성, 전수조사 실시('21.4~8월)
    - \* 총 1,325명(국회의원290명·가족1,035명)의 7년 간 부동산 거래·보유 내역 전체를 조사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30건(25명)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

### ③ 실질적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

- 신고자 보호·보상을 위한 제도적 발전
  - (보호 범위 확대) 부패행위를 국회·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한 사람까지 보호 대상으로 추가('19.10월)하고,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대폭 추가\*하여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('18.5월, '20.11월, '21.4월)



- (비밀보장 강화) 부패·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\*('18.5월, '20.6월) 및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('18.10월)으로 신고자 신분노출 원천 차단
  - \* (종전) 3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  $\rightarrow$  (강화) 5년 / 5천만원
- (보호·보상 제도 강화)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(3개월→1년), 공익 신고 보상금 상한액 상향(20억→30억),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,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신고자 불이익조치 처벌 강화 등
-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
  - 5년간('17~'21년) **254건 보호\***, 보·포상금 **241억원\*\*** 지급, 법 위반자 고발·징계요구 62건, 이행강제금 12건 부과
    - \* 보호건수 : ('17) 17건→('18) 34건→('19) 73건→('20) 80건→('21) 50건
    - \*\* 보·포상금 지급액: ('17) 42억원→('18) 55억원→('19) 43억원→('20) 55억원→('21) 46억원
  -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·보상 및 관련 제도·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지속 상승
    - \*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: ('17) 30.6%  $\rightarrow$  ('21) 51.1%
  - (수입 회복·증대) 4년간('17~'20) 공익신고를 통해 1조 1,165억원 이상의 국고·지자체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발생
  - (신고 활성화)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결과, 각급기관으로 접수되는 공익신고 건수 증가, 4년간('17~'20) 총 946만건 접수

### ④ 국민중심·현장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

- 현장 중심의 고충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
  -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**집단민원**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· 부담을 주는 **고충민원 적극 조사·처리** 
    - \* 4년간 총 176,17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 중 9,230건을 인용('18~'21)
  - 고충민원 처리 사후 밀착관리를 통해 관계기관의 권익위 권고 수용률 역대 최고수준 달성(94.7%, '21.10월)
  -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외지역·사회적 약자를 위한 '국민고충 긴급대응반' 신설('20.10월),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지역형·맞춤형 '달리는 국민신문고' 선제적 운영 등 적극적 국민고충 해소
-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으로 국민불편 해소
  - 여러 기관 관련 민원을 '**한곳에서 한번에**' 상담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'**정부합동민원센터' 개소**('19.10월)
    - \* 5년간 민원상담 1,640만건, 신고상담 12만건, 각종 신청서 접수 20만건 처리
  - 관련 기관과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'민원상담협의회'의 조정·협의를 통해 다수기관이 얽힌 복합민원 27건 처리
  - '국민콜110'의 **상담사 228명**을 직접 고용해 **정규직으로 전환**("21.1월), '국민콜110'과 '부패신고상담1398' 전화요금을 무료화("21.2월)
-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
  - 행정심판 사건 총 **114,062건을 처리**하여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등 **12,565건** 해소('17~'21)

특히, 국민권리의식 향상,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인해 급증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난해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행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

- 일반행정사건 처리 건수 : ('16년) 4,600건 → ('21년) 5,465건 **18.8%**↑
- 일반행정사건 인용률 : ('16년) 18.8% → ('21년) 19.7% **0.9%p↑**
-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('18.11월), 행정심판 조정제도('18.5월), 간접강제제도('17.10월) 도입으로 권익구제 실효성 강화

### 5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개선

- 국민소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
  -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제안,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안건을 권익위나 소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함으로써 국민 중심 행정 실현
    - \* (국민신문고 민원) ('17) 310만건--('21) 1,326만건 / (국민생각함 참여) ('17) 6만명--('21) 44만명
-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의견의 정책환류 강화
  - 탄소중립,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적 현안,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민원분석으로 적기에 국민의견을 정책에 반영



- \* 코로나19 민원 모니터링·분석(총 30만건) → 어학성적 제출연장(3.20), 마스크 반출 예외허용(4.5) 등 68건 제도개선
- 매주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한 「국민의 소리」를 1,191개 기관에 제공, 정기적으로 활용 여부 점검
- 불공정·부패관행 개선 및 국민불편의 근원적 감축
  - (불공정·부패) 생활 속 불공정 및 부패 사각지대 통제시스템 강화
    - \* 대학 입시전형료 폐지·인하('17.7월),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금지('19.10월), 행정 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·신뢰성 제고('21.6월) 등 제도개선
  - (국민불편)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
    - \* 소상공인 수도·가스요금 한시적 감면납부·유예('20.6월),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('21.2월),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('21.9월) 등 제도개선
- 적극행정제도 활성화
  - 국민의 **적극행정 신청을 권익위가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의견 제시** ('21.7월 도입), 소극행정 신고 처리결과 불만시 권익위에 재신고
    - \* '적극행정 국민신청제' 시행('21.7.27), 총 1,667건의 국민신청 접수, 1,570건을 처리하였고, 그 중 92건에 대해 권익위가 개선 권고

# 2. 향후 정책추진 방향

### < 기본 방향 > ---

### □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구제

-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
  - 정부 내 중립적·최종적인 권익구제 전문기관으로서 영세기업, 소상 공인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 해결하고 민생안정 지원
-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  - 다양한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·처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, 행정심판의 공정성·신속성 제고

### ②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·제도 개선

-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
  - 제안, 민원 등 **국민의 목소리를 반영**하여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개선 추진, 민원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개선 지원
-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
  - 경제활성화, 청년지원, 사회안전망, 생활 속 불공정 등 주요 분야 과제 과련 제도개선 추진

### 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 확립

- 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
  - 국가 청렴도 20위권 도약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의 획기적 향상
  -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청렴 역량의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
-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·보상제도 구축
  - 부패·공익 신고 등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개선으로 공정사회를 조성하고 건전재정을 지원

#### 【 권익위 소관사항 국정과제 반영상황 】

#### **[국정과제 13]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**

- <mark>실천과제</mark> 원스톱 행정심판 (권익위 주관)
  -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·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
- <mark>실천과제</mark> 검소한 관사 운영 (권익위 주관)
  - 중앙부처, 지자체, 교육청,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
    - ※ 호화관사 폐지,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,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

### [국정과제 91]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

- 실천과제 공정 기반 구축 (권익위·고용부 공동주관)
  -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
    - ·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
    - · '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'를 통한 상시 단속·점검, 신고 접수·처리 및 직권조사, 교육·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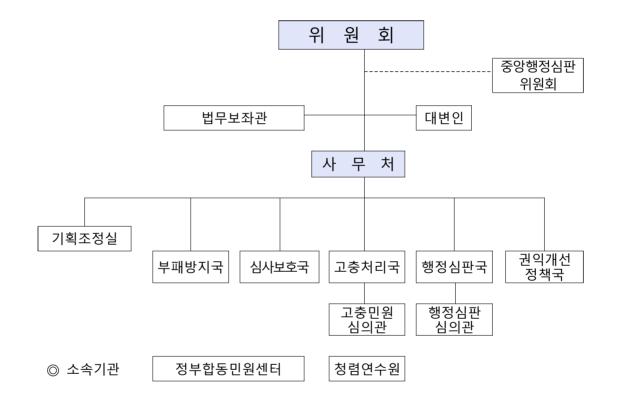
# П

#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

# 1. 국민권익위원회 일반 현황

# [1] 조직

- 위원회: 15인(위원장, 부위원장 3, 상임위원 3, 비상임위원 8)
  - ※ 중앙행심위는 위원장(부위원장 1명 겸임)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(상임위원 4인 이내)
- 사무처 : 1실 5국 2관 1대변인 39과 2소속기관



# [2] 인원

○ 정원 : 551명

(단위:명)

계	정무직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~ 9급	전문 경력관	특정직	연구사
551	4	17	14	34	41	200	230	7	3	1

# (3) 재정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21	'22	'23	'24	'25
□ 재정사업 합계					
ㅇ 총지출	834	933	972	1,013	1,05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8)	(4.2)	(4.2)	(4.3)
ㅇ 총계	834	933	972	1,013	1,05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8)	(4.2)	(4.2)	(4.3)
□ 총지출 구분					
ㅇ 인건비	433	482	516	552	591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5)	(7.0)	(7.0)	(7.0)
ㅇ 기본경비	65	79	81	84	8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22.5)	(2.7)	(3.0)	(3.0)
ㅇ 주요사업비	337	371	375	377	379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0.2)	(0.9)	(0.5)	(0.6)
□ 예산					
o (총)지출	834	933	972	1,013	1,05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8)	(4.2)	(4.2)	(4.3)
ㅇ 총계	834	933	972	1,013	1,05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8)	(4.2)	(4.2)	(4.3)
【일반회계】					
o (총)지출	834	933	972	1,013	1,05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8)	(4.2)	(4.2)	(4.3)
ㅇ 총계	834	933	972	1,013	1,056
(전년대비증가율, %)		(11.8)	(4.2)	(4.2)	(4.3)

### 2.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

### [1] 전략계획의 주요특성

### □ 대·내외 정책환경 변화

- (사회환경)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·실질적 권익구제 요구 증대
  - 포스트코로나 이후 양극화 가속, 고용·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 전부문의 불균형·갈등과 국민고충 심화
  - 현장중심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여 **국민이 신뢰**하는 **실질적인 권익 구제 기관**으로 거듭날 필요
- (정치환경)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사회 '공정과 상식'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상향
  - '반부패·공정', '공직윤리'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따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
- (국제환경)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국가청렴도(CPI) 지속 향상 필요
  -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제일의 요소인 국가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위기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도모 필요
  - \* 국가청렴도(CPI) 10점 상승 시 기대효과 : GDP 8조 5천억원 증가, 매년 일자리 2만7천여개 이상 창출, 4천억원 세입 증가(「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」 '17.12, 서울대학교)

## □ 전략계획의 기본방향

-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대응, 전략 목표에 대한 장·단기 로드맵 수립
  - 2대 전략목표 및 4대 성과목표 설정
- 성과목표별 외부환경·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

### (2) 전략계획의 목표체계

# 목표 체계

임무

위법·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고,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

비전

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,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

#### 전략목표 |

#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.

#### 성과목표 1

•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.

#### 성과목표 2

국민과 함께정책 · 제도를 개선한다.

#### 전략목표 ॥

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.

#### 성과목표 1

• 공직시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, 공공부문 청렴역량을 강화한다.

#### 성과목표 2

•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를 구축 하고, 부패현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

# Ш

# 세부 추진계획

### 전략목표 |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.

#### 기 본 방 향

### ◇ 추진배경

- 국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·소외지역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바, 이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가 절실
-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
   소리를 경청하고, 국민이 바라는 권익구제 및 정책 추진

### ◇ 그간의 성과

- 적극적 국민고충 해소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
  - 5년간 **총 219,247건**(유사 반복 제외 54,061건)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 중 **11,816건**을 **인용**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구제 강화
  - 여러 기관 관련 민원을 '한곳에서 한번에' 상담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'정부합동민원센터' 개소('19.10월)
  - 5년간 행정심판 사건 총 114,062건을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· 부당한 처분 등 12,248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
    - \*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('18.11)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('18.5), 간접강제제도('17.10) 도입
-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·제도 완성
  - 탄소중립, 포스트코로나, 사회안전망 등 **사회 현안, 주요** 정책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(총 26건)
  - 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, 제도개선 추진
    - \* '21년 국민신문고 민원 1,326만건, 국민생각함 44만명 참여
    - \*\* 최근 5년간('17~'21) 총 235건의 공정·포용분야 제도개선 권고

### 기 본 방 향

### ◇ 주요내용

- 국민 고충의 적극적 해결
  -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·부당,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·의견표명 강화
  - 포용사회를 저해하는 집단민원의 조정·해결에 역량 집중
  - 민생·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충해소 확대
  -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한 '한 곳에서 한번에' 종합적 민원 상담
  - 국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  - 행정심판 **국선대리인제도 운영, 온라인 행정심판 개선**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
-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개선
  - 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 등 **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**을 통해 다양한 **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**
  - 협업·개방을 통한 **민원데이터 이용 활성화**로 민원데이터 기반 **정책개선 및 민원해소 지원**
  - 구조적 부패관행·제도의 근원적 개선 및 국민고충·불편해소를 위한 **제도개선** 추진

### ◇ 임무·목표 간 상관성

○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위법·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고, '국민의 나라' 실현에 기여

### [1] 주요 내용

### □ 적극적인 국민권익 구제

- 각 기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제3자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고, 시정권고·조정·합의 등 고충민원 인용률 제고
- 대규모 집단민원, 장기간 표류하는 **갈등사안 등을** 조정·합의를 통해 적극 해결
-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한 '한 곳에서 한번에' 종합적 민원 상담
-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하여 국민 중심 원스톱(ONE-STOP) 행정심판 구현
- 수요자 중심의 EASY 행정심판,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·홍보 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

### □ 국민과 함께 정책·제도 개선

- 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, 대통령실 국민제안 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
 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
- **민원빅데이터 분석**을 통한 정책개선 및 민원해소 지원
-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추진 및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확대를 통한 적극행정 구현

### [2] 성과지표

#### < 전략목표 성과지표 >

성과지표			실적			목표 치	'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	자료수집 방법 (또는 자료출처)
	′17	′18	′19	<b>′2</b> 0	<b>'21</b>	<b>′2</b> 6		(포단 특성정립)	(또는 자료들지)
국민고충 해결률 (%)	92.6	92.0	90.9	92.5	95.4	95.4	최근 5년간 해당 지표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'1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고충민원 시정권고· 의견표명 수용률과 제도개선 수용률이 각각 임계치에 도달 하였고, 전년도 실적치가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임을 감안 하여, 5년 간 평균치인 92.6% 보다 2.8%p높고 전년 실적치와 동일한 95.4%를 목표치로 설정	(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 + 제도개선 수용률) / 2	국민신문고 시스템 자료 계량

### <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>

성과목표 성과지표	실	적	목표치			
정의국표 정의시표	′20	′21	′22	′23	′24	
I-1. 권익행정 만족도(점)	74.4	74.8	75			
I-2.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건수(건)	16	18	20			

####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설정 근거

### ◈ 권익행정 만족도(점)

- (지표의 대표성) `권익행정 만족도' 지표는 고충민원, 행정심판, 민원상담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활동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내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, `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'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, 대표성이 매우 높은 지표임
- (목표치의 적극성) 현 조사모형을 도입한 '13년 이후 '21년까지 9년 동안 72~75점 사이에서 변동하여 왔다는 점,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인용여부가 민원인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어, 인용률의 극적인 증가가 없는 한 해당 지표 또한 현실적으로 극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계치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나, 국민의 시각에서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최근 3년('19 ~'21)간 평균 실적치인 74.4점 보다 0.6%p 높은 74.2점을 목표치로 설정

####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설정 근거

#### ◈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건수(건)

- (지표의 대표성)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에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. 본 지표는 이러한 권고 과정에 민원정보 분석,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측정하는 성과지표로, 권익개선정책국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대표성이 매우 높은 지표임
- (목표치의 적극성)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제도개선 권고는 몇 가지 아이 디어를 행정에 반영하는 차원의 개선이 아닌, 법리와 실무를 고려하고 여러 주제(과제)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완성도 높은 작업으로서, 이 과정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(지체)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. 하지만 그간 공무원 시각에서 이루어진 Top-Down(하향식) 방식의 제도개선을 탈피하고 국민의견이 반영된 Bottom-Up(상향식) 방식의 제도 개선을 확대해야한다는 당위와 목표가 있는 바, 전년도(2021년) 실적치 증가분(2건)과 동일한 증가분을 적용한 20건을 2022년도 목표치로 설정

### [3] 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주요내용	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	갈등관리 계획
	<ul> <li>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약화, 고용 위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적 약자·영세기업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 심화</li> </ul>	<ul> <li>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는 현장행정 활동 대폭 강화</li> </ul>
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	<ul> <li>국민의 권리의식 신장, 님비·핌비 현상의 일반화 등으로 인해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고충민원 신청 증가 추세</li> </ul>	<ul> <li>사회적 현안이 되는 고충민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, 민원 발생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갈등</li> </ul>
	<ul> <li>권익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수용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, 이견 등 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</li> </ul>	으로의 확산을 방지 ○ 관계기관 수용협력회의 개최 등 협의설득 위주의 이행관리를 통하여 갈등 방지 및 자발적 수용전환 유도
② 한 번에 편리하게	<ul> <li>복잡·다기해지는 사회현상을 반영, 민원 상담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 궁금증의 즉각적 해소에 대한 국민 기대치도 증가</li> </ul>	<ul> <li>분야별 자체 학습·연구모임 등으로 상담관 역량 제고에 노력하고,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,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 해소체계 운영</li> </ul>
민원상담·처리	<ul> <li>양질의 국민콜110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사와의 노사 협력·상생환경 구축 등 노무관리 중요성 증가</li> </ul>	<ul> <li>상담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, 노사협의회 등 대화 창구 마련·운영,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생산적인 노사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</li> </ul>

③ 국민중심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	<ul> <li>○ 계속되는 경기둔화, 고용한파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고통 가중</li> <li>○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민원 급증</li> <li>○ 복잡・난해한 사건의 증가</li> <li>○ 국민들이 청구서 작성의 어려움 호소</li> <li>○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</li> </ul>	<ul> <li>○ 금전적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적극 인용,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 활성화</li> <li>○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제거 및 장기미결사건 점검· 관리 강화</li> <li>○ 증거조사, 구술심리의 적극 실 시로 청구인의 입증부담 완화</li> <li>○ 청구서 자동완성기능 및 처분유 형별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 개발·도입, 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도록 개선</li> <li>○ 각 특별행정심판별 의사결정구조, 사건처리·인력운용 현황, 통합의 장·단점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 대상 선별 및 법개정안 마련 추진</li> </ul>
④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	○ 국민생각함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되는 안건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불편이나 개선방향이어야 하나,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어려움	○ 안건을 '추천' '비추천'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비추천된 안건이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유도 ○ 국민생각함 운영진이 주관하는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해 좀 더 정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도록 함
⑤ 빅데이터 분석·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	○ 다수 각급 기관의 경우, 민원 분석 전담인력 등 자체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불충분	<ul> <li>○ 주·월간 동향, 민원예보 등 현안, 이슈 중심의 민원분석 결과 제작·배포로 각급 기관의 민원분석 자료 활용 지원</li> <li>○ 특이민원, 국민생명·안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해당기관에 송부, 대응 지원</li> <li>○ 민원분석시스템 교육·컨설팅 강화로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대한 관심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</li> </ul>
⑥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	<ul> <li>□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 생활 속 불편·불합리 증가</li> <li>□ 공공재정 집행 규모의 증가에도 일부 집행주체의 도적적 해이 및 폐쇄적 특권 향유 내지 불합리한 반칙의 용인 지속</li> <li>□ 기존 법·제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개선의 업무상 특성에 따라이해관계자의 반발, 소관부처의 비협조 등 추진 상의 제약 발생</li> </ul>	<ul> <li>과제발굴, 실태조사, 기관협의· 권고, 홍보·이행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절차에 이해관계집단 및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여 제도 개선 추진</li> <li>종합적 실태조사,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제고하고,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과의 협의·조정 강화</li> </ul>

# 성과목표 I -1 □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.

### [1] 주요내용

### □ 국민고충 적극 해소

- 달리는 국민신문고, 기동해결 특별컨설팅, 국민고충 긴급대응 등을 통해 **사회적 약자,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** 권익구제로 국민고충 최우선 해결
- 장기화된 갈등 사안,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**집단민원 조정을 통한** 사회 갈등 해소
- **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** 및 운영 활성화 추진

### 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 처리

- 맞춤형 전문상담, 상담관 역량 제고 및 상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상담안내 만족도 제고
- **다수기관·복합민원 해결 지원**을 위한 **민원상담협의회 운영** 및 중앙부처 **민워담당 부서** 등과 **협조체계 구축**

### □ 국민중심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
-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방안 마런,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·처리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**행정심판 통합 추진**
- 행정심판의 독립성·전문성 강화
- 조정제도, 국선대리인, 증거조사, 부당성 판단, 변경재결 등 '행정 심판제도 속 제도'를 활용한 권익구제 강화

### (2) 세부 추진계획

### □ 국민고충 적극 해소

- **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**를 통한 민생현장 중심 권익 구제활동 강화
  - (달리는 국민신문고) 다중이용시설, 국가기념일, 지역축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찾아가 전용 버스에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고충민원 해소 편의성과 민원 접근성 제고
  - (기업고충 해소)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'기동해결 특별컨설팅' 운영
  - (국민고충 긴급대응) 긴급 고충현안 발생 시 '긴급대응반' 투입으로 사회 현안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 추진, 즉각적인 해결체계 가동
- (집단민원 조정) 장기화된 갈등 사안,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 민원을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으로 선별, 집중관리를 통해 조정 해결
  - 신속·공정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「집단민원조정법」제정 추진
- (빈발민원 해소) 생활 속 빈발민원을 발굴하고,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고충 유발요인 제거
- (효율적·전문적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)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, 특수 옴부즈만(국방·경찰·기업) 강화 및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(MOU)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 향상
- (고충민원 사후 관리) 이행점검, 수용협력회의, 보고 및 공표 등 단계별 입체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정권고·의견표명의 수용률 제고

### 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 처리

○ (맞춤형 전문상담) 기관별 전문인력, 권익위 조사관, 금융·주택 등 전문가로 상담인력을 구성하여 종합적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

- 분야별 상담사례 DB 구축, 학습동아리 운영 등 상담관 역량 제고 및 상담내용 주기적 모니터링
- 중앙부처 민원담당 부서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, 상담 현황 주기적 분석 및 특이동향 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·보완
- (민원상담협의회 운영) 다수기관 협력이 필요하거나 처리기관이 명확하지 않는 사안을 발굴·논의하여 객관적·합리적 민원해결 지원
- (현장중심 상담서비스 제공) 수도권 지역 중심 상담버스(달리는 국민신문고)를 활용한 현장상담 확대
- (국민콜110) 상담 자체 종결률 향상을 위한 상담 DB 현행화 및 상담사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
  - 기관 콜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로 상담역량 강화
  - 상담사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사협력·상생 등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

### □ 국민중심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
- (행정심판 통합 추진)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의사결정구조, 사건 처리·인력운용 현황, 통합의 장·단점 등 분석한 후 통합방안 마련
  -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·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청구, 진행상황 확인, 사건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
- (독립성·전문성 강화) 행정심판 심리·재결 과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
  -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
- (맞춤형 서비스) 청구서 자동완성, 맞춤형 재결례 제공,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등 「EASY 행정심판」서비스 제공
- o (메타버스 체험·홍보관) 국민들이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진행절차, 심리과정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

# [3] 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주요내용	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	갈등관리 계획
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	<ul> <li>□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약화, 고용 위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적 약자·영세기업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 심화</li> <li>□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, 님비·핌비 현상의 일반화 등으로 인해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고충민원 신청 증가 추세</li> <li>□ 권익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수용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, 이견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</li> </ul>	<ul> <li>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는 현장행정 활동 대폭 강화</li> <li>사회적 현안이 되는 고충민원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,민원 발생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여사회적 갈등으로의 확산을 방지</li> <li>관계기관 수용협력회의 개최 등협의설득 위주의 이행관리를 통하여갈등 방지 및 자발적 수용전환 유도</li> </ul>
② 한 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·처리	○ 복잡·다기해지는 사회현상을 반영, 민원 상담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 궁금증의 즉각적 해소에 대한 국민 기대치도 증가 ○ 양질의 국민콜110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사와의 노사 협력·상생환경 구축 등 노무관리 중요성 증가	<ul> <li>○ 분야별 자체 학습·연구모임 등으로 상담관 역량 제고에 노력하고,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,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 해소체계 운영</li> <li>○ 상담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, 노사협의회 등 대화창구 마련·운영,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생산적인 노사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</li> </ul>
③ 국민중심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	<ul> <li>○ 계속되는 경기둔화, 고용한파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고통 가중</li> <li>○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민원 급증</li> <li>○ 복잡·난해한 사건의 증가</li> <li>○ 국민들이 청구서 작성의 어려움 호소</li> <li>○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</li> </ul>	<ul> <li>○ 금전적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적극 인용,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 활성화</li> <li>○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제거 및 장기미결사건 점검관리 강화</li> <li>○ 증거조사, 구술심리의 적극 실시로 청구인의 입증부담 완화</li> <li>○ 청구서 자동완성기능 및 처분유형별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개발·도입, 청구서 작성단계부터국선대리인을 지원하도록 개선</li> <li>○ 각 특별행정심판별 의사결정구조, 사건처리·인력운용 현황, 통합의장·단점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대상 선별 및 법개정안 마련 추진</li> </ul>

# 성과목표 I -2 국민과 함께 정책·제도를 개선한다.

# [1] 주요내용

### □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

- 국민신문고 확대,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, 국민패널 운영 보완 등을 통해 **다양한 국민의 행정참여 보장 및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**
- 각 분야 전문가 및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**국민의 아이디어**를 정책· 제도개선으로 **환류 강화**

### □ 빅데이터 분석·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

- 국민안전,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**국정 방향**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
- **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**하여 현안과 이슈를 빠르게 포착,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**국민피해 예보체계 운영**

### □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

- 기득권 담합, 특혜 제공 등 부패 사각지대 및 불공정 요인,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국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
-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점검·관리 및 기관 협업 등 **권고과제 이행**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개선의 이행력 제고
- 국민 고충·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적극행정 신청 사항에 대해 **의견제시를 통한 신속한 정책 개선 및 조치** 유도

### [2] 세부 추진계획

### □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

- (국민신문고 고도화) 전 행정·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면 어느 기관과도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 -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**사용자** 중심의 국민소통시스템 제공
  -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일회성으로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원 처리 후에도 관리함으로써 **민원 처리 책임성 강화**
- (국민생각함 활성화)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·제도개선 추진
  - 각 분야 전문가 협업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기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국민생각함의 정책제언 기능 내실화
  - 청소년과 청년·대학생에게 정부 정책수립과 행정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'청소년·청년 공모전' 확대
- (국민의견 수렴)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에 앞서 국민의견을 수렴함 으로써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,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
  -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, 업무에 실제 도움이 되는 의견(댓글)을 확보하기 위해 **국민패널 운영 보완**
  -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거나 제도가 개선된 사례 및 국민생각함·국민패널을 적극적으로 **홍보**

### □ 빅데이터 분석·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

- (민원 빅데이터 분석) 국민안전,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정 방향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
  -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안과 이슈를 빠르게 포착,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국민피해 예보체계 운영

- 민원 빅데이터 동향인 「국민의 소리」(주·월간 동향) 품질 보완·개선 으로 행정기관의 민원 데이터 분석자료 활용도 제고
- (데이터 기반 행정확산) 민원데이터와 유의미한 외부데이터의 융·복합, 학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분석 모델 개발 시도
  - 데이터 활용기관의 민원데이터 분석·활용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
  -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**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보 추가 개방**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민·관 **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**

### □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

- (제도개선 발굴·추진) 청렴사회 기틀 마련 및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행정, 경제, 복지·고용, 교육·문화, 환경·안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요인, 예산낭비, 국민 고충유발 사례를 집중 발굴·개선
- (제도개선 이행관리) 국민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역점 추진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·참여에 의한 개선안 마련으로 수용률 제고
  -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점검·관리 및 기관 협업 등 권고과제 이행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개선의 이행력 제고
- (적극행정 국민신청) 공익적 성격의 적극행정 신청 사항 및 소극 행정으로 신고되었으나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의견제시를 통한 신속한 정책 개선 및 조치 유도
  -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핵심 참여 통로로 활용되도록, 신청 요건 및 절차를 지속적·다각적으로 홍보
  - 권익위 의견제시 이행현황 등 처리결과의 주기적 점검·평가 및 필요시 직접 제도·정책 개선으로 연계 처리

# [3] 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주요내용	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	갈등관리 계획
① 국민 중심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	○ 국민생각함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되는 안건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불편이나 개선방향이어야 하나,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어려움	<ul> <li>안건을 '추천' '비추천'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비추천된 안건이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유도</li> <li>국민생각함 운영진이 주관하는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해 좀 더 정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도록 함</li> </ul>
② 빅데이터 분석·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	○ 다수 각급 기관의 경우, 민원 분석 전담인력 등 자체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불충분	<ul> <li>○ 주·월간 동향, 민원예보 등 현안, 이슈 중심의 민원분석 결과 제작·배포로 각급 기관의 민원분석 자료 활용 지원</li> <li>○ 특이민원, 국민생명·안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해당기관에 송부, 대응 지원</li> <li>○ 민원분석시스템 교육·컨설팅 강화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관심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</li> </ul>
③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	<ul> <li>고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 생활 속 불편·불합리 증가</li> <li>공공재정 집행 규모의 증가에도 일부 집행주체의 도적적 해이 및 폐쇄적 특권 향유 내지 불합리 한 반칙의 용인 지속</li> <li>기존 법·제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개선의 업무상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반발, 소관부처의 비협조 등 추진 상의 제약 발생</li> </ul>	<ul> <li>과제발굴, 실태조사, 기관협의· 권고, 홍보·이행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절차에 이해관계집단 및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여 제도 개선 추진</li> <li>종합적 실태조사,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제고하고,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과의 협의·조정 강화</li> </ul>

### 전략목표 ||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.

#### 기 본 방 향

### ◇ 추진배경

-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**국가** 이미지 및 국가청렴도 제고
- 부패관행을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**민·관이 함께** 하는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추진

### ◇ 그간의 성과

-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반부패 체계 구축
  - 대통령 주재 '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'를 구축, 채용비리·생활적폐 등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제도화(17.9월~, 총 7회)
    - \*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수립('18.4월),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논의('21.3월) 등
  - 경제·언론·시민사회 등 각계 국민이 참여하는 **'청렴사회민관협의회'** ('18.3월~)를 중심으로 반부패·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
- 반부패 법령 제·개정을 통한 부패통제 실효성 강화
  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('21.5월), 공공재정환수법 제정('19.4월)
  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\*('18.1월),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\*\*('21.8월) 등
    - \*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를 규제
    - \*\*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 가능
  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개정으로 **공익신고 범위 확대**(공익신고 대상법률 수 279개→471개, '21.4월), **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**('18.10월) 등
- ⇒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('22.1.25)한 '21년도 국가청렴도(CPI)는 총 180개국 중 32위(62점)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

### 기 본 방 향

### ◇ 주요 내용

- 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
  - 사회 각 부문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·공정 개혁 추진
  -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,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등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
  -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고위직,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의 **청렴의식 확산**
  - 한국의 반부패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 반부패 협력사업 확대
-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구축 및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
  -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대상·범위 확대,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엄정 대처 등을 통한 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
  - 부패·공익침해 취약분야 실태조사,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, 불공정·불합리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등 추진
  - **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실태점검**을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

### ◇ 임무·목표 간 상관성

○ 반부패·청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패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

### 전략목표2

###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을 확립한다.

### [1] 주요내용

### □ 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

- **부패방지 정책·제도의 재정비**를 통한 공공·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
- 청탁금지법('16년 시행), 이해충돌방지법('22년 시행) 등 **반부패 행위** 규범 운영을 내실화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안착
- 고위공직자, 공기업, 공정채용 등 수요자 **맞춤형 청렴교육** 및 **법정** 청렴교육(연 2시간) 이행관리 강화
- o 한국의 반부패 성과 공유를 위한 **국제 반부패 협력사업 확대**

### □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구축 및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

- 신고자 보호·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, 신고자 보상금 상향, 보호 조치 실효성 제고 등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개선
- 비실명 대리신고 확대,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한 **부패·공익신고** 활성화
- **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실태점검** 및 체계적 신고 관리로 공공재정 누수 근절
-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, 불공정·불합리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등 추진

### [2] 성과지표

#### < 전략목표 성과지표 >

성과지표	실적				목표 치	'26년 목표치 산출근거	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자료수집 방법 (또는 자료출처)	
	′17	′18	<b>′19</b>	<b>'2</b> 0	<b>′21</b>	<b>′2</b> 6		(工亡 号 8 省)	(또는 자료들지)
국가청렴도 (CPI, 점수)	54	57	59	61	62	68	최근 5년간 평균 실적(60.6점)과 '20년도 실적인 61점을 감안하여 '26년까지 68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  < 연도별 목표치 현황 > ('21)62점/32위 → ('22)64점/29위 → ('23)65점/28위 → ('24)66점/27위 → ('25)67점/26위→ ('26)68점/25위	WEF, PERC 등 개별 국제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평가 결과를 국제투명성 기구(TI)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종합	국제투명성기구 (TI) 결과 발표

#### <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>

성과목표 성과지표	실	적	목표치		
영과국표 영과시표 	′20	′21	′22	′23	′24
田-1.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대국민 부패인식도(%)	48.4	60.9	57.4		
П-2. 부패·공익침해·공공재정 낭비 등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건수(건)	-	6	8		

####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설정 근거

### ◈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대국민 부패인식도(%)

- (지표의 대표성)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 조사를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결과지표로서, 성과목표인 '반부패·청렴정책 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'의 정책목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대표 지표
- (목표치의 적극성) 최근 5년간 실적치가 등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평균치 (58.5%)보다 높은 3년치 평균치(57.4%)를 목표로 설정

### ◈ 부패·공익침해·공공재정 낭비 등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건수(건)

- (지표의 대표성) '부패·공익침해·공공재정 낭비 등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건수'는 부패(공직자의 남용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), 공익침해(국민의 건강·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), 공공재정 낭비(보조금·연구개발비 등 편취) 등 취약 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부패 등 근절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, 조사의 노력도와 적극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바, 부패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함

###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설정 근거

- (목표치의 적극성) 부패·공익침해·공공재정 낭비 등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조사·심사인력은 유지됨에 따라 인력 대비 업무량이 증가하여 실태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,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'21년 실태조사 6회보다 2회 증가한 8회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함

# (3) 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주요내용	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	갈등관리 계획
① 부패방지 정책·제도의 재정비	<ul> <li>○ 평가자들의 선입견,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 인식 등우려,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정립 전환 필요성</li> <li>○ '22년부터 개편·시행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에대한 피평가기관의 관심·이해도부족으로 일시적 혼란 발생 우려</li> </ul>	<ul> <li>전문가 및 평가기관 등에 대한 전략적 협업, 의견수렴 진행,</li> </ul>
		<ul><li>반부패 정책 홍보 체계 및 소통 방법 개선,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</li></ul>
		<ul> <li>피평가기관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·설명회· 간담회 등의 다양한 소통 추진</li> </ul>
		○ 평가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, 반부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시 의견수렴 실시
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	<ul> <li>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법 해석·적용 관련 혼란 발생 우려</li> <li>청탁금지법행동강령 실태점검 등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추진시 타기관과의 이견 발생 가능</li> </ul>	<ul> <li>법 시행 전 공공기관 대상 업무 편람 배포, 교육 및 설명회를 적극 실시해 법 이해도 제고 및 혼란 방지</li> <li>실태점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,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등 협업체계 강화</li> </ul>
③ 청렴교육 확대	<ul> <li>청렴교육 의무화, 각종 반부패 법령 제정 등으로 증가하는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청렴교육 효과성 저하 등 불만 발생 우려</li> </ul>	<ul> <li>학습자 요구와 학습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교육 수요충족</li> </ul>
④ 민간·국제분야 협력 강화	○ 공기업 등 대상 청렴윤리경영 정책 개발·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합성 미흡으로 인한 효과성 저하 우려	<ul> <li>정책간담회, 교육·컨설팅 등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제도 도입으로 정책의 수 용성, 집행의 순응성 확보</li> </ul>
	지아 구너  ○ 코로나-19 상황으로 인한 UN반 부패협약 이행점검 및 보고서 채택 지연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 책과 제도에 대한 현행화된 정책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기 어려움	<ul> <li>외교부·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적시성 있는 반부패 정책자료를 제공하고, KOTRA 등 국제교류 기능수행 공공기관과의 반부패 국제홍보 공조 노력 강화</li> </ul>

⑤ 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	○ 신고자 보호·보상 관련 법 개정 시 관련부처 등과 이견 발생 우려	<ul> <li>법개정 추진 시 토론회 및 관련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실시</li> </ul>
⑥ 부패·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	<ul> <li>부패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시 스템으로 부패신고 창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어, 기존 자체 시스템 운영기관과 이견 발생 우려</li> </ul>	○ 청렴포털 신고처리시스템 신규 도 입에 따른 기존 자체 신고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실시
⑦ 공공재정 누수 방지	<ul> <li>코로나, 정치적 이슈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저조 우려</li> <li>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권고안 및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해당 공공 기관과 이견 발생 우려</li> </ul>	<ul> <li>외부 상황을 고려한 공개시기 결정 및 충실한 공개내용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</li> <li>권고안 마련 전에 충분한 소명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</li> </ul>
⑧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	<ul> <li>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성이 높고 상위법령 준수 의무가 적어 개선 권고사항의 발굴 및 수용 어려움</li> <li>채용비위 의혹 제기로 인한 공정 채용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</li> </ul>	○ 소관부처·국회 등 감사결과, 권익위 민원현황 등을 검토하고 대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○ 채용비위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 규명 및 피해예방·구제 실시

# 성과목표॥-1

#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, 공공부문 청렴역량을 강화한다.

### [1] 주요내용

### □ 부패방지 정책·제도의 재정비

-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**청렴선진국 도약**의 기틀 마련을 위한 국가청렴도(CPI) 지속 향상 추진
- 새롭게 개편된 **종합청렴도 평가**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**반부패 개선 노력**을 촉진·지원하고, **반부패·청렴 문화** 확산

### 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

-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한 제도 안착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
- 공직환경 변화에 맞춰 **행위규범을 강화**하고, 실태점검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등 **반부패 법령의 실효성 향상 도모**

### □ 청렴교육 확대

- **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확대·강화**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하고 위로부터 지켜지는 청렴 문화 조성
- LH 부동산 사태 등을 계기로 제기된 공기업 등의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·전문적 **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** 신설 및 본격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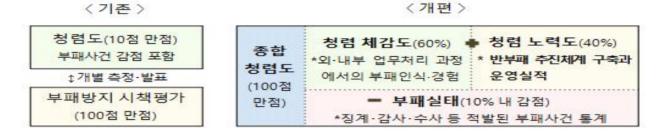
### □ 민간·국제분야 협력 강화

- **청렴사회민관협의회** 등을 통한 **반부패 거버넌스 확립** 및 **청렴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** 등을 통한 반부패·청렴정책 혁신
- 반부패 교류·협력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국제홍보 강화

### (2) 세부 추진계획

### □ 부패방지 정책·제도의 재정비

- (국가청렴도 향상) CPI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리 지수 선정을 통한 역량 집중 및 지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강화
- (감사관회의 내실화) 수직적·일방적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방향 전달을 탈피, 기관의 피드백 절차를 도입하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워
- (개편 종합청렴도 평가) 개별적으로 평가·발표되던 기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·운영



### 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

- (이해충돌방지법) '22.5월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한 제도 안착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
  - 법 시행에 필요한 지침 등 세부 규정 마련, '찾아가는 이해충돌 방지법' 강의 등 기관별 자체 교육 지원, 업무편람 배포
  -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'이해충돌방지법 표준 신고시스템' 구축 추진
- (청탁금지법·행동강령) 부패 예방을 위한 행위규범을 강화하고, 제도 운영 실태점검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한 취약분야 발굴·개선
  -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,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·운영 설명회 등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 지원

### □ 청렴교육 확대

- (고위직 청렴교육)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대상 '청렴리더십 과정',
   지방의원 대상 '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', 기관장이 참여하는 '청렴 Live' 등 교육과정 운영
- (청렴윤리경영 교육) 공기업 등의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·전문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
- (이러닝 확대)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속히 증가한 이러닝 청렴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, 다양한 교육창구 확대 및 교육과정 개선
- (콘텐츠 개발) 교육 효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상별·연령별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

# □ 민간·국제분야 협력 강화

- (반부패 거버넌스 확립)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청렴정책 모니터단 등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를 통한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
  - 경제계·시민사회·학계 등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부문의 합의를 통해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, 시의성 있는 정책제안 도출
- (청렴윤리경영 확산) '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'을 개발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부문의 청렴윤리경영 자율 실천 지원
- (청렴문화 확산) 청렴사회 협약의 지속적 이행 및 신규협약 추진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의 자율적·실천적 노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
- (반부패 교류·협력) UN반부패협약, OECD 청렴작업반 등 주요 국제반부패라운드에서 국제사회의 반부패 의제에 적극 동참
- (반부패 정책 국제홍보) 국제교류를 주된 기능으로 가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

# 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주요내용	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	갈등관리 계획
① 부패방지 정책·제도의 재정비	<ul> <li>○ 평가자들의 선입견,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 인식 등우려,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정립 전환 필요성</li> <li>○ '22년부터 개편·시행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에대한 피평가기관의 관심·이해도부족으로 일시적 혼란 발생 우려</li> </ul>	<ul> <li>전문가 및 평가기관 등에 대한 전략적 협업, 의견수렴 진행,</li> <li>반부패 정책 홍보 체계 및 소통 방법 개선,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</li> <li>피평가기관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·설명회·간담회 등의 다양한 소통 추진</li> <li>평가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, 반부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시 의견수렴 실시</li> </ul>
②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	<ul> <li>○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법 해석·적용 관련 혼란 발생 우려</li> <li>○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실태점검 등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추진시 타기관과의 이견 발생 가능</li> </ul>	<ul> <li>법 시행 전 공공기관 대상 업무편람 배포, 교육 및 설명회를 적극실시해 법 이해도 제고 및 혼란 방지</li> <li>실태점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폭넓게 수렴하고,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등 협업체계 강화</li> </ul>
③ 청렴교육 확대	<ul> <li>청렴교육 의무화, 각종 반부패 법령 제정 등으로 증가하는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청렴교육 효과성 저하 등 불만 발생 우려</li> </ul>	<ul> <li>학습자 요구와 학습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교육과정 운영등으로 교육수요충족</li> </ul>
④ 민간·국제분야 협력 강화	<ul> <li>○ 공기업 등 대상 청렴윤리경영 정책 개발・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실적합성 미흡으로 인한 효과성 저하 우려</li> <li>○ 코로나-19 상황으로 인한 UN반 부패협약 이행점검 및 보고서 채택 지연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행화된 정책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기 어려움</li> </ul>	○ 정책간담회, 교육·컨설팅 등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제도 도입으로 정책의 수 용성, 집행의 순응성 확보 ○ 외교부·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 밀히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적시성 있는 반부패 정책자료를 제공하고, KOTRA 등 국제교류 기능수행 공공기관과의 반부패 국제홍보 공조 노력 강화

# 성과목표॥-2

# 신뢰받는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를 구축하고, 부패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

### [1] 주요내용

### □ 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

-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일원화,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,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등 신고자 보호 관련 법·제도 강화
-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, 신고자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**징계처분** 의무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

### □ 부패·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

- 부패·공익신고의 이첩·송부율 및 적발률 관리 통해 사건 관리 강화
-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착 노력을 통한 사각지대 관리 강화
-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 확대

### □ 공공재정 누수 방지

- 공공재정 **부정수급 취약분야**를 **개선**하고,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**대국민 공개** 추진
-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사건 **적발 강화** 및 **신속 처리**

### □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

- **제·개정 및 현행 법령, 지자체 자치법규, 공공기관 사규**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발굴·개선
-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공정채용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항 이행점검

### [2] 세부 추진계획

### □ 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

- (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일원화) 위원회 소관 법률별로 각각 규정 되어 있는 신고자 보호·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
  - 반부패 법률별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·보상 제도 간 차이가 있어 국민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별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·보상 규정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으로 통합·보완
- (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)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범위 확대
- (신고자 비밀보장 강화)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및 신고자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,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 강화
- (신고자 지원 강화) 보상금·포상금 지급기준·한도 상향 및 부패 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
  - 보상대상가액 대비 지급비율을 **구간제**(부패 4%~30%, 공익 4%~ 20%)에서 정률제(30%)로 변경하고 보상금(30억)·포상금(2억) 상한 조정

### □ 부패·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

- (부패·공익신고 사건 관리 강화) 이첩·송부가 필요한 사건에 조사력 집중, 무혐의 처리한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적극 재조사 요구 등
- (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) 비위면직자 입력 누락률이 높은 분야 집중관리 및 기타소득 점검으로 **사각지대 최소화** 
  - 현장점검, 연금제한자 전수조회, 범죄경력조회 등 자료 취합·분석
- (청렴포털 개선) 이해충돌방지 의무신고 시스템 개발, 비실명 대리 신고 온라인 구현 등 시스템 고도화

### □ 공공재정 누수 방지

- (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) 상·하반기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취약 분야 발굴, 공공재정환수제도 컨설팅 등 추진
- (이행실태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) 공공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행실태 점검결과 분석자료를 브리핑,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
- (신고사건 처리 강화) 신고사건의 적극적인 이첩·송부, 신속한 처리로 수사·감사의 적시성과 국민만족도 확보

### □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

- (법령 부패영향평가) 제·개정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발굴· 개선을 통한 부패발생 가능성 근본적 개선
  -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확인·점검
  - 부패·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구조적으로 부패 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법령 점검
- (자치법규 점검) 지자체 자치법규 중 인·허가, 계약, 인사 등 부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부패·불공정 사전 제거를 위한 전수 점검
- (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)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 전수조사
  - 공정채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발굴 및 제도개선
- (공정채용 이행 지원) 공정채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교육·컨설팅 추진

# [3] 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주요내용	외부환경·갈등요인 분석	갈등관리 계획
① 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	○ 신고자 보호·보상 관련 법 개정 시 관련부처 등과 이견 발생 우려	○ 법개정 추진 시 토론회 및 관련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실시
② 부패·공익침해 현안 적극 대응	<ul> <li>부패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시 스템으로 부패신고 창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어, 기존 자체 시스템 운영기관과 이견 발생 우려</li> </ul>	○ 청렴포털 신고처리시스템 신규 도 입에 따른 기존 자체 신고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실시
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	<ul> <li>코로나, 정치적 이슈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저조 우려</li> <li>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권고안 및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과 이견 발생 우려</li> </ul>	<ul> <li>외부 상황을 고려한 공개시기 결정 및 충실한 공개내용으로 국민 관심도 제고</li> <li>권고안 마련 전에 충분한 소명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</li> </ul>
④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	<ul> <li>지자체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개선권고 사항의 수용에 어려움 발생 우려</li> <li>채용비위 의혹 제기로 인한 공정 채용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</li> </ul>	<ul> <li>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이 미반영되는 등 입법오류에 의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중점 점검</li> <li>채용비위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 규명 및 피해예방·구제 실시</li> </ul>